

文대통령, 새해 '국민 통합' 강조...이낙연發 사면론 힘받나

신년 인사회서 통합 강조...“새해는 통합의 해”

일상 회복·선도국가 도약...‘국민 통합’ 새 화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 통합을 처음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결과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가 됐다 때문이다.

사면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으로 결단 여부가 주목 받아온 가운데 나온 문 대통령의 통합론이 향후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직후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신축년(辛丑年) 맞이 신년 인사회 모두 발언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며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긍정하고, 자부하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치적 갈등과 국민 분열 상황이 계속되면 새해 화두로 꺼냈던 ‘국민의 일상 회복’ 약속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새해는 도약의 해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빠른 경제회복, 뛰어난 문화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한 국민 역량을 보여줬고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페이스 북을 통해 공개한 신년 메시지에서 국

민의 일상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새해 국정운영 화두로 제시한 이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을 약속하고, 성공적 방역을 발판 삼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게 일주일 동안 문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출공 신년 메시지 → 신년 인사회 → 신년사 발표 → 신년 기자회견 순으로 자리를 거듭하며 한해 국정운영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 자리를 빌려 국민 통합을 새로운 화두로 더한 것은 향후 공식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밝힐 메시지를 예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법적으로 사면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는 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국민 통합은 이 대표의 신년사 뼈대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밝힌 신축년 신년사에서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며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를 향한 전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같은 날 진행된 뉴시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며 사면론을 공론화 했다.

이 대표가 공론화 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또한 국민 통합적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사이의 개연성에도 많은 시선이 쏠린다.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민 통합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이 대표의 구상이다. 당사자의 반성 없이 사면이 어렵다는 당 지도부 내 거부감에 따라 의견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논란을 임시 수습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대표가 띄운 사면론은 문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면 건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할 입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면론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진 것이며,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면을 염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 둔 것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안철수 “야권 승리 위해 어떤 분도 만날 용의 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7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서울 시민들과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은 안 대표에게 국민의힘으로 입당 혹은 합당하는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며, 안 대표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서울시

장에 출마하겠다는 ‘조건부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오 전 시장의 의견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서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자는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오 전 시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야권 승리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어떤 분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인 6일 이뤄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에 대해서는 “새해 인사만 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김종철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심각한 문제”

“CEO 면책되고 안전담당이사가 덩터기 쓰게 될 것”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은 이 외에도 여러 조항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갑자기 추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제외됐다”라며 “이게 왜 문제냐면

통계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산재사고의 30~35%가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설비 등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정부가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법을 만든다거나, 조항을 만들어 지원하면서 잘 지키게 해야 하는데 야에 (적용 대상에서) 빼버린 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원래는 (책임자에) 대표이사 및 안전담당이사로 지정했는데 이거를 여야가 논의하면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바꿨다’라며 “이렇게 ‘또는’으로 해놓으면 반드시 안전담당이사 쪽으로 책임이 다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EO들은 면책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안전담당이사들이 덩터기 쓰고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장비 임대자의 보건·안전 의무조항이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도 타워크레인 사고 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된 (중)장비를 임대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았을 텐데”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유예 조항에 관한 논의까지 다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을 4년간 유예하는 문제가 논의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나라 사업장의 98.8%를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1.2%에만 적용하는 법이 되는 거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에서 산재사고의 85%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준비 기간을 6개월, 조금 길게 주면 몇 개월 더 주더라도 한번에 같이 시행해야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몇년 미뤄둔다면 85%의 산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단 법안을 제정한 다음 후속으로 보완하는 여당 측의 입장에 대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나중에 고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중기부나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가 과연 노동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건지”라고 성토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